국가부채 상한조정 합의 난항 전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월 7일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초당정책센터(BPC)는 미국 국가부채가 2월 15일에서 3월 1일 사이에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의회가 이 기간까지 국가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됨.

- 미국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상한에 도달하였으나 재무부가 연방공무원 연금과 외화안정화 펀드의 재투자 중지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2,000억 달러를 마련하여 디폴트 사태를 피하고 있음.
- 따라서 2월 15일에서 3월 1일 이전에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지출을 연기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.
- 2011년 8월, 국가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했을 때에도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기 직전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의 상향조정에 합의하였지만,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음.

■ 그러나 공화당 측이 재정절벽 합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행을 2개월 연기한 정부지출 자동삭감 프로그램(sequester)에 대한 협상과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를 연계할 뜻을 나타내면서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.

-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공화당의 합의 없이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정절벽 합의 당시 시행을 2개월 연기하기로 한 정부지출 자동삭감 프로그램 협의를 부채한도 문제와 연계해 백악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.
-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재정지출 문제와 결부시킨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.

(Reuters등, 1/9)